

2016년 10월 31일(월) 배포시(08:30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담당자 불임 리스트 참고 (관계부처 합동)

정부,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

- 조선연관업종의 특별금융지원·기술혁신·수출지원 전용 프로그램 가동
- 보완 먹거리 발굴을 통해 조선업 의존도 완화 및 지역산업 구조 개선
⇒ 이를 위해서 5개 조선밀집지역에 2020년까지 투융자 3.7조원 마련
- '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' 제도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 연내 완료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주형환)는 '16.10.31(월)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난 6월 발표한 조선 구조조정 대응대책에 따른 조선지역 종합대책으로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」을 발표함
- 금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지역의 위기를 해소하고, 보다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에서 대책 마련
 - ① 조선업 침체로 동반 어려움에 처한 조선연관업종의 사업여건 개선
 - ② 조선업 보완먹거리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개선
 - ③ 조선업 등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위기지역에 신속·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서 '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' 제도 도입

조선밀집지역에 '17년까지 2.7조원, '20년까지 투·융자 3.7조원 마련

단기 정책자금 (2.3조원)

- 긴급경영자금 6.8천억
- 특례보증 8천억
- 조선구조개선펀드 2천억
- 소상공인 융자 6천억 등



조선기자재 경쟁력 강화 (0.4조원)

- 50개 R&D과제 486억
- 사업전환지원자금 1,250억
- 지방투자보조금 1,191억
- 23개 수출 프로그램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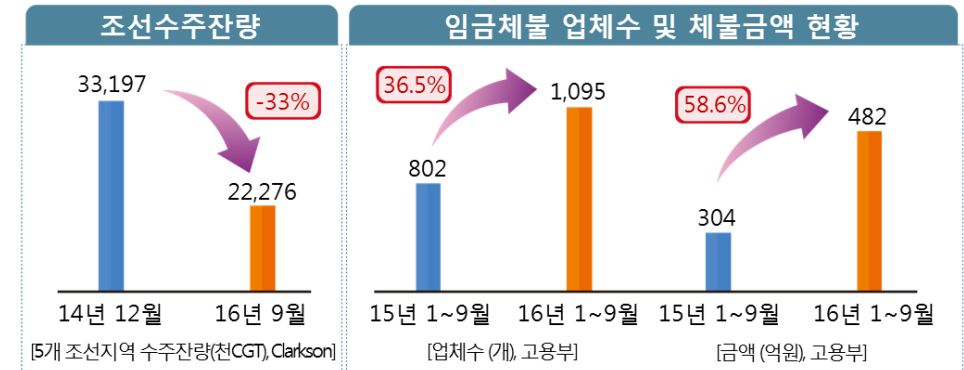


조선 보완 먹거리 육성 (1조원)

- 규제프리존 연계형
- 고용자원 활용형
- 주변산업 연계형 등

I. 조선밀집지역 특성 및 경기동향

- 조선업은 조선사·기자재업체·협력업체가 클러스터화 되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구조로, 조선밀집지역은 조선경기에 민감
 - * 경남권(거제·통영·고성), 울산권(동구·울주), 전남권(영암·목포), 부산권(강서·영도), 전북권(군산) 등 5개 권역 10개 시·군·구에 조선업 생산액의 93% 집중
 - * 5개 권역의 조선업 비중 : 조선업 종사자중 87%(13.7만명), 지역 생산액의 65%
- 최근 조선업 침체로 조선업 의존도가 높은 5개 조선밀집지역에서는 조선수주잔량 하락, 임금채불 급증 등 경기 위축 가시화



- 더불어, 시장·마트 등 지역상권도 동반 위축되어 지역내 주민 경제·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
 - * 소상공인 BSI('13.9→'16.9월): 경남(-29↓), 울산(-15.7↓), 전남(-35.8↓), 부산(-11.3↓), 전북(-24.6↓) / 출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II. 조선기자재·협력업체 등 조선연관업종 애로 집중 개선

- 조선업발 지역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조선기자재, 협력업체 등 조선연관업종과 지역주민·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여건을 집중 개선

【 1.7조원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 등 경영안정화 지원 】

- (금융지원) 조선연관업체들의 자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(6.8천억)·특례보증(8천억)·펀드(2천억) 등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
-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용자금리 인하('16년 4분기 기준 3.52→2.47%), 요건(대출10%감소 등)예외 등으로 특별우대하고, 보증한도가 차서 추가대출이 어려운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도 5개 지역위주로 확대
- (대체일감) 발전소·가스 인프라 등 약 1조원 규모의 대체 일감을 발굴하고, 사업참여 자격 인증시 조선소 납품 실적도 인정하여 진입장벽 해소

【 조선기자재업체 기술혁신 및 수출지원 전용프로그램 마련 】

- (기술혁신) 기술고도화를 위한 20대 R&D과제 지원(336억원), 스마트 공장 보급(58억원) 등으로 기술공정 혁신을 적극 지원
- (수출산업화) 「기자재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」, 국내외 통합 전문 전시회, 23개 특별수출지원 프로그램*, 글로벌 파트너링 등 내수 중심기자재업체들의 글로벌 벤더화 지원

※ KOTRA, 무보, 중진공, 수출입은행 등 10개 기관에서 해외수요발굴·바이어발굴·제품마케팅·수출금융 등 수출 쏠주기에 걸쳐 23개 프로그램 운영

- (사업다각화)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30대 핵심 R&D과제 개발(150억원), 투융자 자금 마련(2,441억원)* 및 1:1 전담 지원체계 가동

* 사업전환지원자금('17년 1,250억원) 및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('17년 1,191억원)

구분	경영안정 지원	기술 혁신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긴급경영안정자금 (6.8천억원) ▪ 조선연관업체 특례보증 (8천억원) ▪ 조선구조개선펀드 (2천억원) ▪ 대체일감 발굴 (1조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0대 기술고도화 R&D (336억원) ▪ 스마트공장 보급 전용 프로그램 ▪ 시험인증센터 조기 구축 ▪ 산학협력 통한 전문인력양성 등

구분	수출산업화 지원	사업 다각화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진출프로그램 ▪ 국내외 통합전문 전시회 개최 ▪ 23개 특별 수출지원프로그램 운영 ▪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다각화 30대 핵심과제(150억원) ▪ 사업전환지원자금 (1,250억원) ▪ 지방투자촉진보조금 (1,191억원) ▪ 1:1 전담 지원체계 가동 등

* 밀줄 친 정책자금의 사용신청은 중기청에 문의 (붙임 연락처 참조)

【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 】

- (정책자금) 저리 경영안정자금(변동금리 2.08%)·전환대출(금리 5%) 등에 용자재원 6천억원 제공
- (상권 활성화) 조선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코스 개발·상품화 등 '핵심관광지 육성사업'(240억원/17신규, 문체부) 등을 추진하고, 5개 지역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(現10개소→17년 11개 추가/20.4억원)하여 조선밀집지역내 상권활성화 촉진

【 사내협력업체 등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보호 등 6.30 대책 보완 】

- 6.30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“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대책”에 이은 추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지원 시책 보완

구분	지원내용
고용보험 미가입자 보호	▪ 피보험자격 자진신고기간 연장(당초 9.8일 → 12.31일) 및 과태료 면제
사회보험료 납기연장확대	▪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징수예외
직업훈련	▪ 조선업 밀집지역의 폐업 또는 폐업위기 자영업자 대상 특화 서비스 제공 (~ 12.31일)
지역 일자리 사업 지원	▪ 지역·산업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사업 지원 (600억원/16추경)

III. 조선업 보완 먹거리 육성에 2020년까지 1조원 신규 투자

- 지역별 규제프리존 전략산업 중심으로 보완먹거리를 육성을 통해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산업구조 개선 추진
- 보완먹거리는 조선업 연관성과 조선지역 주변의 산업 및 고유자원 등 장점을 활용하여 3가지 유형으로 발굴하여 규제완화 및 R&D, 인력, 세제·금융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

유형 ① 시도별 2개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중 **조선밀집지역과 규제프리존 연계형** 인접하고, **전후방 연관성이 높은 분야**를 중점 지원

전략산업	주요 지원 방향
지능형 기계 (경남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규제프리존 연계 생산기계 및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기계산업 지능화 및 핵심 소재·부품 국산화 추진 수요-공급부문간 융합 얼라이언스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
친환경 자동차 (울산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친환경차부품 관련 기술개발 및 융합컨텐츠 개발 충전 및 기반인프라 확충을 통해 '20년 미래차 1만대 보급 추진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운영 등 신규 수요 창출
드론 (전남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규제프리존 연계 규제완화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드론 활용 유망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활성화 (무인택배·전력설비 감시 등) 무인항공기 분야 기술력 제고 및 개발·운용 전문인력 양성 등
해양 관광 (부산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규제프리존 활용 지역특화 관광상품개발 및 산업여건 개선 등 크루즈·마리나 중심 해양관광 클러스터화 (펀드 조성, 레저기반 확충 등) 해양관광 대중화 위한 홍보·체험사업 확대 (국제크루즈 박람회 등)
탄소 산업 (전북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탄소기업 투자유치 및 종합지원 Biz센터 등 탄소산업 클러스터화 원천기술 및 가공기술 국산화 추진 탄소소재 인증지원·보급사업을 통한 신시장 창출 등

유형 ② 조선업 역량·인프라에 바다, 간척지 등 지역의 **고유자원 활용형** **고유한 입지적 특성을 접목하여 사업다각화** 추진
 * <예> (거제·통영·고성) 레저선박, (영암·목포) 해상풍력, (군산) 농·건설 기계

유형 ③ 원전·화력발전소 등 주변의 **발전플랜트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주변산업 연계형** **친환경플랜트, 발전용 설비 부품** 분야로 조선기자재 진출 유도
 * <예> (울산 동구·울주) 친환경 플랜트, (부산 강서·영도) 발전용 설비·부품

IV. 지역경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

- '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' 제도 도입을 통해 조선, 철강,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대응을 위해 **신속하고 체계적인 상시 위기대응시스템**을 구축할 계획
 - 이를 위해 산업부는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개정안에 대해 국무회의 등 정부입법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제출(10.27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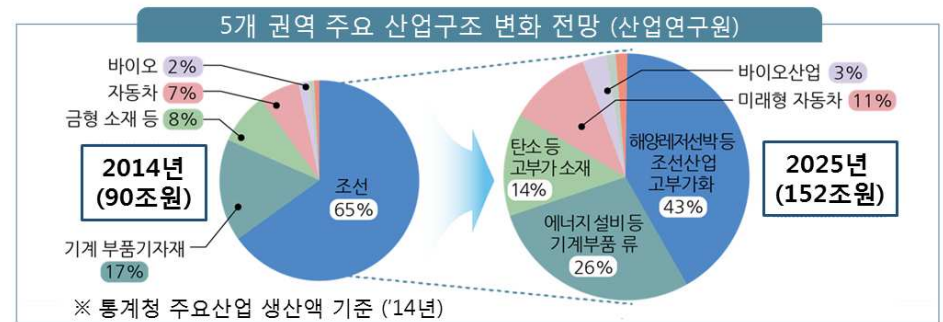
- 특별지역에는 단기경영 및 고용안정, 지역특화발전, 혁신역량 구축 등 **6대 부문 28개 예시 프로그램**을 지역특성과 산업여건에 맞게 패키지 지원

특별지역 6대 부문 지원프로그램 예시

- ① **금융·세제** : 융자지원, 신용보증, 국세·지방세 납부기한 연장, 신산업펀드 등
- ② **신규 수요 창출** : 공공조달 참여 확대, 신규시장 개척, 수출 기업 지원 등
- ③ **고용지원** : 고용유지지원금, 지역일자리, 실직자 지원, 재취업 지원 등
- ④ **사업재편·지역특화발전** : 사업다각화, 업종전환 투자보조금 지원 등
- ⑤ **지역혁신역량 구축** : 정부R&D지원, 산학융합지구, 스마트공장보급 등
- ⑥ **지역상권활성화** : 전통시장 현대화, 관광활성화 지원, 맞춤형셀링 등

V. 기대효과 및 향후 운영

-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**보완먹거리 발굴·육성** 등을 통해 **조선업 의존도 완화** 및 **지역산업 구조 다각화** 기대
 - 5개 조선밀집지역의 조선업 의존도는 '14년 약 65%에서 2025년 43%로 22%p 완화 전망
 - 지역산업 생산규모도 약 1.7배 성장 전망 ('14년, 90조원→'25년 152조원)



- 한편, 산업부는 금일 대책 발표 직후 정만기 1차관 주재로 11.1(화) 5개 조선지역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세부지원방안을 설명하고,
 - 각 시도로 하여금 현재 운영 중인 조선위기대응 관련 TF를 **지자체별 위기대응본부(본부장: 부지사급)**로 확대·개편하여, 지역기업들이 금일 대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및 보완해 나갈 계획

[붙임]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[붙임]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◇ 「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」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 당 부 서		담 당 과 장	담 당 자
산업부	지역경제총괄과	천영길(044-203-4410)	조근상 서기관(044-203-4411)
			김범수 사무관(044-203-4451)
	지역산업과	박찬기(044-203-4420)	황승완 사무관(044-203-4422)
기재부	지역경제정책과	문경환(044-215-4570)	고상현 사무관(044-215-4571)
고용부	지역산업고용정책과	이현옥(044-202-7404)	고병현 사무관(044-202-7405)
행자부	지방세특례제도과	김성기(02-2100-3626)	홍자은 사무관(02-2100-3627)
금융위	기업구조개선과	이동훈(02-2100-2920)	정 훈 사무관(02-2100-2831)
	산업금융과	안창국(02-2100-2860)	박보란 사무관(02-2100-2865)
중기청	정책총괄과	이준희(042-481-4537)	이형철 서기관(042-481-4540)
	기업금융과	황영호(042-481-4545)	추경훈 사무관(042-481-4382)
	소상공인지원과	정영훈(042-481-4534)	남기동 사무관(042-481-4528)
	시장상권과	조재연(042-481-4559)	이정구 사무관(042-481-4563)
조달청	기술서비스총괄과	강성민(070-4056-6111)	조주형 서기관(070-4056-6112)
미래부	소프트웨어진흥과	신상열(02-2110-1840)	이윤규 사무관(02-2110-1811)
문체부	관광정책과	강정원(044-203-2811)	이상무 사무관(044-203-2821)